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6-05

여연포커스

YDI FOCUS

발행일 2016년 6월 27일 (월)

2016년 미국대통령 선거 - 이슈와 정책 -

- 목 차 -

要 旨	i
I. 2016년 미국 대선: 후보경선의 결과	1
II. 클린턴 후보의 정책입장	2
III. 트럼프 후보의 정책입장	8
IV. 클린턴과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13
V. 한국에의 시사점	15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 이슈와 정책 -

작 성 유 성 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담 당 유 성 현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2016 미국 대통령 선거현황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총 6차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2차 보고서는 미국 대선 양당 후보의 주요정책을 비교하는 글로,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의도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 要 旨 》

- 2016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임
 - 5월 24일 있었던 워싱턴 주 경선의 승리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1,238명의 대의원수를 확보, 공화당의 “잠정적 후보(presumptive candidate)”로서 자리 매김했고,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역시 6월 5일 푸에르토리코에서 승리함으로써 2,384명의 대의원수를 확보, 후보결정에 필요한 2,383명을 넘었음
- 양당의 후보자는 확정됐지만 최근 대선 가상대결 조사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당 후보자 모두의 정책을 비교·검토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클린턴의 국내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에너지와 환경, 세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정책 방향이나 인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임 민주당 대통령인 빌 클린턴 그리고 현 오바마 대통령과 연속성을 갖고 있으나,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공세적일 것으로 예측됨
- 트럼프의 국내정책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의 지속적인 공화당 주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세, 이민, 의료보험 등에서 대체로 공화당의 입장 혹은 공화당의 강성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다만 트럼프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책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언급 역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정확한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트럼프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외정책은 ISIS 및 테러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과 무역불균형과 조작적인 환율정책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무역질서를 미국의 입장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말로 간결하게 표현됨
 - 전체적으로 경제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대외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이라 천명

- 대외정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의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는 국제문제 개입이나 군사력 사용에 적극적인 매파의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 후보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웠던 반면, 이번 대선은 그러한 공식이 깨지고 민주당 매파 대 공화당 비둘기파라는 낯선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
 - 클린턴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핵무기 포기까지 북한을 고립시키는 제재를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은 UN과 추가적인 제재 부과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함
 - 트럼프의 경우 한반도 발언의 일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하나의 일관성은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은 떨어짐
- 미국 대선의 국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조짐들은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미국 의회와 정부 내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줄 우호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을 찾아내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책결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 캠프 구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의 당선보다는 이미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사들로 캠프가 구성되어 있는 클린턴의 당선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I. 2016년 미국 대선: 후보경선의 결과

- 현재까지의 후보경선결과로 보면, 2016년 대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음
- 5월 24일 있었던 워싱턴 주 경선의 승리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1,238명의 대의원수를 확보하여 후보결정에 필요한 1,237명을 넘어서 공화당의 “잠정적 후보(presumptive candidate)”로서 자리매김했으며,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역시 6월 5일 푸에르토리코에서 승리함으로써 2,384명의 대의원수를 확보, 후보결정에 필요한 2,383명을 넘어서 양 자 대결을 거의 확정지었음(확보 대의원수는 New York Times 추산 기준)
- 후보운곽이 드러난 현재 상황에서 그간 클린턴의 압도적인 우세가 지배적이었던 트럼프와의 가상대결의 판세가 최근 박빙으로 나타난 조사들이 나오면서 본선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선과정에서 두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을 국내 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할 것임

Ⅱ. 클린턴 후보의 정책입장

1. 국내정책: 오바마와 샌더스를 절충하라!

- 전체적으로 클린턴의 국내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에너지와 환경, 세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수행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샌더스 후보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클린턴은 민주당 지지자 규합을 위해 절충안을 제시함
- 자본주의 개혁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민주당 후보경선 토론에서 그녀는 북유럽 모델에 대한 지지자가 아니며 미국은 미국식의 모델이 있고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 미국 경제가 더 좋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경제와의 친화성을 부각시키려 함
- 후보 캠프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클린턴 후보의 국내정책은 크게 금융개혁, 사회보장, 이민문제, 의료보험, 일자리 및 경제, 에너지 기후 변화 등 모두 여섯 가지 부문으로 구분됨

① 금융개혁

- 오바마 행정부의 연장선상에서 금융회사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인 Dodd-Frank 금융규제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1)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함.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
- 무분별한 금융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Volker Rule(미국 내 상업은행 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소유물 교환금지: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됨)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겠다고 주장함
- 전체적으로 금융회사 CEO의 회사관리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② 사회보장(Social Security)

-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노인의료보험(Medicare)을 사유화하려는 노력에 반대.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투자 회사의 주식투자를 반대함
 - 사회보장과 노인의료보험의 운영에 부유층의 기여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함.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음
 - 노인의료보험 수혜자들을 위해 처방약 가격을 낮추겠다고 천명함
- 한자녀 가정이나 중증 환자, 그리고 아동을 돌보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혜택을 확대할 하겠다고 주장함

③ 의료보험

- 오바마 의료보험제도의 수호 및 확대를 주장함
 -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것과 같이 모든 주에서 무상의료부조(Medicaid)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실행하는 주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확대할 것을 밝힘
- 처방약 가격의 상승 억제를 위해 제약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약품의 원가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에 매진토록 유도함
- 여성의 임신관련 의료서비스(피임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함

④ 일자리 및 경제, 조세정책

- 노동자와 수익을 나누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실시함. 일종의 미국판 동반성장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과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근로규칙을 개선함

- 조세제도를 개정하여 최부유층이 현재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며, 최부유층의 조세누출(tax loophole) 방지를 강화하여 대학생 학자금 및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
- 감세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소위 “Buffet rule”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5 이민문제

- 전반적으로 이민정책이 보다 인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함
- 불법이주민에 대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부여 기회를 인정
- 이산가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할 예정
-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국사회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에 비인간적인 국경 가족 억류수용제도를 개선하고, 시설이 열악한 가족 억류센터 폐쇄를 공언함

6 에너지 기후변화

- 향후 10년 내 2005년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을 제안
-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주정부와 시정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함
- 석유회사 및 천연가스회사에 대한 낭비성 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한편, 청정 산업으로의 이행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탄광업체의 수익감소에 대해 지원할 것을 약속함
- 연료효율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메탄가스 감축을 줄여나갈 것을 공언함
- 이러한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진보적인 입장. 2015년 7월 27일 아이오와(Des Moines, Iowa)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선거캠페인의 핵심쟁점으로 내세울 것을 천명한 바 있음

- 클린턴은 2012년 Keystone XL pipeline 건설에 찬성한 바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2015년 7월 공식적으로 폐기, 반대로 돌아섬

2. 대외정책: 동맹 강화와 미국의 리더십 회복

- 2016년 대선은 2012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국내경제 이슈와 함께 안보 및 외교정책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지속되는 혼란, 그리고 예상을 넘어서는 ISIS 테러위협 등으로 민주, 공화 양 당의 후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태해결을 위한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음
-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다자주의적 국제주의 노선에 따라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추구해 왔음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국내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재정문제와 국제정세에 있어서도 상대적 패권쇠퇴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신중을 기한 나머지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전체적으로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정책 방향이나 인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임 민주당 대통령인 빌 클린턴 그리고 현 오바마 대통령과 연속성을 갖고 있으나,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공세적일 것으로 예측됨
 - 클린턴의 캠페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외정책에 관한 입장으로 크게 일곱 가지를 거명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정책들은 이란과 핵문제, ISIS 격퇴전략, 대중국정책, 대러시아정책, 동맹관리 정책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1] 이란 핵문제와 이스라엘

- 클린턴은 이란 핵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국적인 협상을 지지함. 스스로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distrust and verify”라고 밝히고 있으며, 협정의 어떠한 위반에도 전면적인 규제 재도입과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음

-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지속할 것임을 밝힘
- 실제로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개선 될 것으로 보임

② ISIS 격퇴전략

-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이 온건한 시리아 반군들을 무장, 훈련시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함
- 2015년 11월 파리와 베이루트에서의 테러 직후 IS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이는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중동지역에 있는 ISIS의 격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양산으로 이어질 세력기반의 붕괴와 해체, 그리고 미국과 동맹 국가들의 방어체계 공고화 등으로 구성됨
- 다만 문제해결을 위한 지상군 투입은 배제하고 정보수집 기능강화, 공중폭격,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치중할 것임을 밝힘
- 실제로 클린턴은 부시 행정부 당시인 상원의원 시절 이라크 전쟁에 찬성한 바 있고, 국무장관 시절 아프가니스탄 증파에 찬성했으며, 리비아에 대한 강력한 군사개입을 옹호했었음

③ 대중국정책

-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아시아 다자제도를 구축한 장본인이며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주창한 인물임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클린턴은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임을 밝힘. 특히 남중국해의 움직임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어할 것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인권문제를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음

-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지역의 갈등요소가 점증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견제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공화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The U.S.-China relationship is not one that “fits neatly into categories like friend or rival”)
- 중국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걸맞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국제제도와 규칙의 준수를 중국 측에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임

4 대러시아 정책

- 클린턴은 군축 등에서 러시아와의 협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러시아의 과도한 확장에는 NATO 동맹 강화와 유럽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증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요구한 바 있음

5 동맹강화정책

- 클린턴은 기존의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찬성, 스스로도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임을 밝힘
-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쿠바 뿐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국가들에게도 적용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클린턴은 현 오바마 대통령의 동맹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세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음
- 실제로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클린턴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어떠한 국가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음(Create partnerships for tomorrow)
-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옹호, 확산함으로써 미국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잠재적인 동맹세력으로 끌어안겠다고 밝힘

Ⅲ. 트럼프 후보의 정책입장

1. 국내정책: 공화당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 국내문제에 있어서 트럼프의 정책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의 지속적인 공화당 주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세, 이민, 의료보험 등에서 대체로 공화당의 입장 혹은 공화당의 강성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실제로 경선과정에서 그의 언급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 혹은 민주당의 정책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정책제안들이 존재함
- 다만 트럼프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책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언급 역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정확한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그의 언급과 공식 홈페이지에 기반한 트럼프의 국내정책은 의료보험, 조세제도, 이민정책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

① 의료보험

- 오바마 의료보험제도를 철폐하고 보다 시장친화적인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함. 이는 사실 경선에 나섰던 모든 공화당 후보들의 주문이었음
- 퇴역군인을 위한 정책이 다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함
- 퇴역군인들이 질환 치료를 위해 기다리던 시간을 단축하고 건강보험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군 제대 후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 퇴역군인들이 기존의 보훈병원을 넘어 환자가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향상함

② 조세제도

- 전체적으로 감세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공화당의 주류 조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생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상속세의 완전한 철폐도 주장
- 다만 가장 부유한 계층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세금누출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기업의 조세누출(tax loophole)을 없애겠다고 천명함
- 중산층에 대한 세제 개혁도 구체화하였는데, 소득 세제 구간을 종전의 7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개인소득 25,000불 이하, 가족소득 50,000불 이하의 가정에 소득세 면제를 약속
- 재정적자와 부채를 감소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함

3 이민국정

- 이민정책은 트럼프의 가장 특징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국내정책분야
 - 실제로 2015년 6월 강경한 이민정책을 천명하면서 출마를 선언하였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것이 이민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함
 - 멕시코 국경장벽 등 여러 설화에 시달리고 있으나 실제 트럼프의 이민관련 공약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민정책의 핵심원칙으로 국경 있는 국가, 법질서가 유지되는 국가, 자국민을 우선시 하는 국가로 규정한 후, 그에 따라 적합한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이민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민문제를 다룰 공무원 수를 증대하고, 불법이민자 전자검증 시스템 구축을 강조함. 또한 범죄경력 이민자를 본국으로 송환조치하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2. 대외정책: 동맹국 무임승차 용납 안 해

- 현재 트럼프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외정책은 ISIS 및 테러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과 무역불균형과 조작적인 환율정책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무역질서를 미국의 입장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말로 간결하게 표현됨
- 2016년 4월 27일 미국국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단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음
- 더욱이 그가 이야기한 “미국우선주의”를 충실히 따를 경우 과연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짐
- 전체적으로 경제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대외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이라 천명
- 대외정책을 구체화한 4월 27일 연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군사문제, 통상정책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트럼프 대외정책연설의 주요 내용 (Foreign Policy Speech,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2016년 4월 27일)

- 냉전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며 기존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한 5개 약점을 지적함
- 1) 미국의 자원이 무분별하게 확대 사용됨; 2) 미국의 동맹국은 공정한 지분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 3) 미국의 우방국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봄; 4) 중국 등 경쟁국가들이 미국을 경시함; 5) 미국이 더 이상 외교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트럼프는 “새로운 합리적 외교정책(new, rational American foreign policy)”을 표방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급진적인 이슬람 방지를 위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고 우방의 기여를 촉구함
- 미국의 군대와 경제를 재건할 것임
- 미국의 핵심이익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작성: 중동지역에서 급진적 변화보다는 테러를 분쇄하고 지역안정을 촉진, 러시아 및 중국과 평화우호관계 유지, 동맹국과 재정공약 재균형 추구, 상대국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 사용
-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기보다는 서구적 가치와 제도를 재생하도록 동맹국과 함께 노력함: 군사적 개입을 통한 민주주의 이식은 지양함

2] 군사문제

- ISIS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할 것을 천명
-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ISIS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 반이슬람을 위한 친러시아 정책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 경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킬 것임
- 이란 핵협상은 반대하지만 쿠바와 국교정상화는 찬성

3] 무역·통상문제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협상 실시: 이러한 협정들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다고 주장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부정적 입장: 결국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으로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함

- 일본 등의 환율조작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45%의 징벌적 상계관세 부과)
- 미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행적인 기술이전 요구에 강경하게 대처, 필요한 경우 WTO에 제소
- 멕시코가 국경에 세워질 '장벽'의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자발급수수료 인상 조치
-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하며 일본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비판

IV. 클린턴과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 대외정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의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는 국제문제 개입이나 군사력 사용에 적극적인 매파의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 후보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웠던 반면, 이번 대선은 그러한 공식이 깨지고 민주당 매파 대 공화당 비둘기파라는 낯선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남
 - 클린턴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핵무기 포기까지 북한을 고립시키는 제재를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은 UN과 추가적인 제재 부과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함
 -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보다 많은 군사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트럼프의 경우 한반도 발언의 일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하나의 일관성은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은 떨어짐

1] 클린턴의 한반도 정책: 오바마 정권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예상돼

- 북핵문제를 과거 행정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을 천명하고 있지는 않음
- 국무장관 시절,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미 양자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 조약으로 대체하며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러한 인식은 북한 스스로 국가전략 변화의 선행을 전제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책변화는 없음을 의미
-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설리번(Jake Sullivan)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5월 16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 핵모델의 북한 핵문제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함

- 설리번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문제도 언급했는데 이는 미중 관계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
-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셔먼(Wendy Sherman)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를 끌어올린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요약하면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이고 측근들에 의해 북한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②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동맹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협상할 것

- 3월 26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 두 국가들이 미국주둔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고려해볼 것이라 밝힘. 그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자 발언을 번복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함
- 미국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문제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함
-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안보문제를 무역·통상문제와 결부지어 인식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며 협상의 무기로 활용할 것을 시사함
-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을 활용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천명
- 미중 간의 무역관계를 카드로 활용한다면 중국이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결국 북한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것임을 주장. 관련하여 중국 수입 물품에 45% 관세 부과를 천명하였으나 미국도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대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짐
- 최근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를 함으로써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 그러나 이는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평가를 받음

V. 한국에의 시사점: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탈냉전 이후 미국경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주요 통상국가와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우려됨
- 클린턴은 트럼프에 비해 동맹을 더 중시여기고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트럼프 정도는 아니어도 미군주둔이나 동맹유지 등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더 큰 기여를 요구할 여지는 있음
- 더욱이 후보 경선 국면에서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반자유무역주의 여론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보호무역주의의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에서 대외문제보다 국내정치적 이슈들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에 비해 보호무역의 강화와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최근 블룸버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산 제품 수입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65%에 이르고 있고, NAFTA에 대한 긍정평가는 29%에 그치는 반면 부정평가는 44%로 부정적 여론이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 등의 정책이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얻을 여지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와 직결되는 문제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가 높아질 것은 자명해 보이며,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관련국가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미룰 가능성도 높음
- 미국 대선의 국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조짐들은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임

- 결국 당연한 것이겠지만 미국 의회와 정부 내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줄 우호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을 찾아내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책결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는 캠프 구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의 당선보다는 이미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사들로 캠프가 구성되어 있는 클린턴의 당선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포커스」의 전문을 www.ydi.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07238)